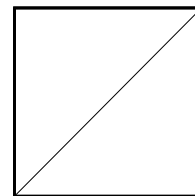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0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4. 17. (제 7 차)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전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4. 17.

## 1. 의결주문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조치를 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85조제8호, 제422조제1항, 제428조제1항, 제449조제1항 및 제2항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4항제1호, 제379조제1항, 제390조, 별표19의2, 별표22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 \*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 \*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44조제1항 및 제3항, 제4-16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34조, 별표2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8조
-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4조의2제1항, 별표2,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3년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2023.1.12.) 심의필
- 2024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2023.3.27.) 심의필

<별지>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245백만원 및 과태료 116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다른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85조제8호, 제428조제1항, 제449조제1항,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87조제4항제1호,  
제379조제1항, 제390조, 별표19의2, 별표22,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제87조제4항제1호,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44조제1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9조,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4조, 별표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8조

## □ 임직원 에 대한 조치

### ○ ♠♠♠ : 문책경고\*

\*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어, 「금융  
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1단계 가중

- 조치사유 :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다른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422조제1항,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44조제1항 및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5조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금융기관의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제1항

○ ♥♥♥ : 과태료 15.1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90조, 별표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3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 ◇◇◇ : 문책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부과

\*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1단계 가중

- 조치사유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85조제8호, 제422조제1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87조제4항제1호, 제390조, 별표22,  
「금융기관의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제1항

○ ♣♣♣ : 문책경고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90조, 별표22

○ ♠♠♠ :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90조, 별표22

○ ♥♥♥♥ : 과태료 3백만원 부과 건의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90조, 별표22





## 2. 조치사유

### 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이하 ‘한일퍼스트’)가 20xx.x.xx.부터 설정·운용해 온 ‘●●●●●● ●●●●●● 제x호’ 및 ‘제x호’ 2개 펀드는 ☎☎ 소재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인 ■■■■■■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의 100% 자회사이자 실질 사업주체인 ■■■■가 ■■■■에 지급하는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전환사채 이자(연 6%)를 상환 받다가 ■■■■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사모집합 투자기구로서,

- 사업주체인 의 영업실적 저조,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연쇄적으로 의 채무불이행(default)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와 가 각각 홍콩과 중국에 소재하고 있어 두 회사에 상이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 코스닥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 한일퍼스트는 펀드의 리스크를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①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최대주주 (지분율 100%)인 ♠♠♠에게 xx회에 걸쳐 총 xxxx백만원(대여잔액 최고 xxx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xxx일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xxx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21.7.30.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xxx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의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4호 및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 다.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한일퍼스트는 집합투자업자로서 xxxx.x.xx. [X][X][X][X][X][X]를 설립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 한일퍼스트가 투자 및 컨설팅 영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 조치의 법적 근거 :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 라.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일퍼스트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現감사)는 xxxx.xx.x. ~ xxxx.xx.xx. 기간 중 고유재산이 보유한 ○○○○○○ ○○ 등 공모주 주식 xxx개 종목을 수시 매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 한일퍼스트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의 법적 근거 : 「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 마.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한일퍼스트 ■■■■■■ ■■■■■■■■■■■■■■■■■■■■■ 제x호’ 펀드를 xxxx.x.xx. 설정(원본액 약 xx 억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 ① 설정일(20xx.x.xx.)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 중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신탁계약서 §18)하였음에도

xxxx.x.xx.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xxxx.x.xx.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x회, 위반비율 XX.XX%p ~ XX.XX%p)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 ② 집합투자규약에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제한(신탁계약서 §17)하였음에도

XXXX.X.X. ~ XXXX.X.X. 기간 중 총 x회에 걸쳐 ■■■■■■■■■■■■■■■■■■■■■ 제x회 전환사채 등 무등급 채권(총 XX.X억원)을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조치의 법적 근거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1호

\*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 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① ♠♠♠은 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② ♥♥♥는 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③ ◇◇◇은 XXXX.X.X~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X개 회사에서 개설한 X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④ ♣♣♣은 XXXX.X.X~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데도, X개 회사에서 개설한 X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⑤ ♠♠♠은 XXX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

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 XXXX.X.X~XXXX.X.X. 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X개 회사에서 개설한 X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재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⑥ ♥♥♥는 XXXX.X.X~XXXX.X.X.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母)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 XXXX.X.X~XXXX.X.X. 기간 중의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 XXXX.X.X~XXXX.X.X. 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 및 타인 명의의 X개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내역 >

(단위 : 개, 백만원, 일)

구 분	직 위	성 명	명의	위반계좌	거래기간	거래 종목수	최대 투자원금	매매 일수
매매명세 미통지	대표	♠♠♠	본인	유진	'XX.XX.X~'XX.XX.XX	X	6.7	5
	감사	♡♡♡	본인	키움	'XX.X.X~'XX.XX.XX.	XX	74.2	50
	차장	♠♠♠	본인	미래에셋	'XX.X.XX~'XX.XX.XX.	XX	7.8	22
	前대리 <sup>2)</sup>	♥♥♥	타인 <sup>3)</sup>	대신	'XX.X.X~'XX.XX.XX.	X	34.5	16
복수계좌 이용 <sup>1)</sup>	부사장	◇◇◇	본인	유진 한국투자	'XX.X.XX~XX.X.XX	X	11.2	4
	준법 감시인	♣♣♣	본인	삼성 대신 NH투자	'XX.XX.XX~'XX.X.X.	X	169.4	9
	차장	♠♠♠	본인	NH투자 하나금융 한국투자	'XX.X.XX~'XX.X.X.	X	5.1	11
	前대리 <sup>2)</sup>	♥♥♥	본인· 타인 <sup>3)</sup>	대신	'XX.X.X~'XX.XX.X.	X	27.9	4

주: 1)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1개 계좌는 위반내역에서 제외

2) 2020.7.1. ~ 2021.11.23. 재직

3) ◆◆◆(♥♥♥의 母)

- 조치의 법적 근거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내지 제4항

##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②~②① (생략)

②② 이 법에서 “집합투자계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②③~②⑨ (생략)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④ (생략)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3. (생략)

③~⑦ (생략)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7. (생략)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③ (생략)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 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2. (생략)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 4.~5. (생략)

②~④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0.~49. (생략)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⑥ (생략)

##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③~⑦ (생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3. (생략)

② (생략)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3. (생략)

4.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생략)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③~④ (생략)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생략)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

## 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 2.~6. (생략)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재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 2.~4. (생략)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 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2.~9. (생략)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19의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3. (생략)

4.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생략)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3. (생략)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9. (생략)

□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

2.~6. (생략)

7.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① (생략)**

② 영 제64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2.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영 제64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생략)

7. (생략)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5. (생략)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생략)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⑥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0. (생략)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 23.~2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6. (생략)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10.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사. (생략)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생략)

2. (생략)

② (생략)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 3.~9. (생략)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생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1호	5,000
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2호	5,000
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7호	3,000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2.~8. (생략)

②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위험관리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7. (생략)

8.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등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

나.~마. (생략)

③ (생략)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4. (생략)

②~⑨ (생략)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5. (생략)

②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0. (생략)

21.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2.~23. (생략)

②~③ (생략)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② (생략)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생략)**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5. (생략)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 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생략)

8. (생략)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생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18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②~④ (생략)

<별표 3>

### 과징금 부과기준

#### 1. (생략)

####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 가. 과징금 부과 기조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1.5 중(2점)
-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1.5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1.5 중(2점)
-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1.5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1.5 중(2점)
-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1.5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1.5 중(2점)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1.5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1.5 중(2점)

나. 삭 제

다. 삭 제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삭 제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 삭 제

(7) 삭 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 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삭 제

(7) 삭 제

-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삭 제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위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3. 예정금액의 산정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가. 가중 사유

- (1) 삭 제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3) 삭 제
- (4) 삭 제

####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삭 제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생략)

###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6>

##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 1.~2. (생략)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 가.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나.~마. (생략)

### 4. (생략)

##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2. (생략)

###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 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와의 관여 정도

<별표3>

###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I. 공통부문

##### I-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 1. (생략)

######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 (현지조치 포함) 가능)

###### ②~③ (생략)

###### 3.~5. (생략)

#### III. 금융투자부문

##### III-1.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제한 위반

###### 1. 제재대상

-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및 이를 회피할 목적의 교차거래, 연계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제3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다른 상대방과 거래시와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등)를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 2. 제재기준

조치기준	제재양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50% 미만이 되는 경우	기관 : 기관경고 이상 임직원 : 문책경고(감봉) 이상
기 타	기관 : 기관주의 이상 임직원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주) 특수관계인 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임

## 3. (생략)

## III-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

### 1. 제재대상

-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행위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 2. 제재기준

- 위법매매기간중 최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거래금액(투자원금 기준)	제재양정
1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1억원 미만	문책경고(감봉)

### 3. 가중 및 감경

- 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임직원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으며, 정직 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매매일수가 100일 이상되는 등 빈번한 매매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통해 매매한 경우, 조사분석인력·투자운용인력 또는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이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 실명법」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계좌개설 신고는 하였으나, 매매명세 통지만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매매금액이 소액이거나 매매일수가 짧은 등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16.3.3.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규정 및 이 세칙에 규정된 해임권고·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행매매·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임직원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제재양정 결과 '주의'로 양정되는 경우 및 기타 제재를 감경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1단계 감경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금융투자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0